

의안번호	제호
의결 연월일	년월일 (제회)

충북지역(충북대, 건국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촉구 결의안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연월일	2023년 11월 1일

충북지역(충북대, 건국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2023. 11. 1.
제안자: 교육위원장

□ 주 문

- 공공보건 의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책무 강화와 공공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 충북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충북지역 의대 정원 확대,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국립대병원 국고지원을 75% 상향 지원, 의료취약지 및 필수 의료 분야 의료 수가 개선 및 지역 의사제 시행을 촉구함.

□ 제안이유

- 보건복지부는 '지금의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2030년에 4,094명, 2035년에는 9,654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 이래 18년째 동결되어 있는 상태로, 조속히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
- 충북의 경우 충북대 의대 정원 49명은 전국 국립대 10곳 중 최하위권이고, 충주 건국대 의대 정원 40명을 합한 충북지역 전체 의대 정원 89명도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 197명의 45% 수준으로 인구가 비슷한 강원도(267명)와 전북(235명)의 1/3수준임.

- 전체적인 의료환경도 매우 취약하여 치료 가능 사망자 수와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비가 전국 1위이나, 의사 수는 전국 14위, 의료기관 수는 13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
 - 특히 충주, 제천, 괴산, 단양을 비롯한 충북북부지역 대부분이 응급의료취약지 또는 분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어 의료환경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지역 간 의료환경 불균형과 격차,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충북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을 반드시 건립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함.
- 보내는 곳 : 대통령실(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충북지역(충북대, 건국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촉구 결의안

OECD가 발표한 '보건통계 2022'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한의사를 제외하면 2.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2030년에 4,094명, 2035년에는 9,654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 이래 18년째 동결 상태로, 조속히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충북은 이와 같은 열악한 의료환경 문제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충북대 의대 정원 49명은 전국 국립대 10곳 중 최하위권이고, 충주 건국대 의대 정원 40명을 합한 충북지역 전체 의대 정원 89명도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 197명의 45% 수준으로 인구가 비슷한 강원도(267명)와 전북(235명)의 1/3수준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충북지역의 의대정원 확대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 의료체계 붕괴 위기 대비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아울러 충북은 전체적인 의료환경도 매우 취약하여 인구 1천명 당 입원환자 수 연평균 증가율과 치료 가능 사망자 수는 전국 1위이나 의사 수와 의료기관 수는 각각 전국 14위와 13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충북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충주, 제천, 괴산, 단양을 비롯한 북부지역 의료환경은 매우 심각하다.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연간 미충족의료율은 충주시 14.2%, 제천시 11.2%, 단양군 11.0%로 충북도 평균 8.6%보다 높게 나타나 북부권 시군 대부분이 응급의료 취약지 또는 분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다.

「의료법」과 「공공보건의료법」에서는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누구나 '지역·계층·분야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충북 북부권의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시설 확충은 필수적인 현안이며, 2017년부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은 충북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충청북도와 함께 정부의 의료 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충북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을 희망하는 22만 충주 시민을 비롯한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충북지역 (충북대, 건국대) 의과대학 정원을 221명 이상 우선 추가 배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충북 북부지역 도민의 안정적인 공공의료서비스 확보를 위해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의료 지역격차 해소와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행 25%인 지방 국립대병원 국고지원율을 75%수준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공백 해소와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공공성이 담보된 지방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의료 취약지 및 필수 의료 분야 의료 수가 개선과 지역의사제를 시행하라.

2023. . .

충청북도의회